

중기부-외교부, '원팀 협의체'로 中企·벤처 해외진출 지원

법인 설립·사업 시에 걸림돌 되는 현지 법, 제도 등에 실질적 도움

외교부, 유·무형 글로벌 네트워크 중기부, 수출·스타트업 정책 결합

외교관 출신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외교 역량이 점점 빛을 발하고 있다.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 (원팀 협의체)를 구축,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중소·벤처기업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원팀 협의체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수출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20~25개 공관에 우선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지 법, 제도, 규제 등에 관해 재외공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영주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간 지원 협약식에서 (왼쪽 4번째부터)오영주 중기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조 장관은 "취임 후 연이어 경제 협단체를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의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가가는 민생·경제의 교"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가 손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교부는 유·무형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중기부는 수출·

스타트업 정책을 결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내용에는 ▲재외공관에 원팀 협의체 구성 ▲공공기관·민간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결집 ▲외교부·중기부, 유관기관·협·단체, 민간기업,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참여하는 국내 지원 협의체 별도 구성 ▲현지 기업·기관에게 정책 정보 적시 제공 ▲해외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에 한국 창업생태계 홍보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공동사업 확대 ▲중소기업 등에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하는 공적 개발원조사업 추진 협력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오 장관은 "재외공관은 가장 많은 정보가 모이는 곳이다. 대사가 현지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3개월마다 진행하는 정례적인 기존 협의체도 있다. 이를 통해 현지 진출 중소기업이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하자는 게 협의체의 요체"라면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네트워크가 많은 재외공관이 이번 MOU와 후속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의 애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수출·진출을 위해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도 출동한다.

기보와 창진원은 외교부 산하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약도 별도로 체결했다.

창진원의 틱스(TIPS), KOICA의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 그리고 기보의 CTS 기술보증 등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간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등 유관 프로그램 간의 연계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간다. 공동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또 기업 해외진출·ODA 활동 지원, 기업협력 유관 행사 연계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성과를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오 장관은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현지와 국내의 여러 기관이 가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협력의 중점을 뒀다"며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업계,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기중앙회 "절박함 외면 않길" 청구인에 中企단체 등 305명 참여 처벌수준 합리화·규정 명확화 요구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청구인 모집에는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

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305명이 참여했다. 청구 비용은 청구인들이 각각 부담하고 중기중앙회 등 단체는 간접 청구인으로 참여해 자료료 등을 부담한다.

중기중앙회 정운모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

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자리엔 중기중앙회 배조용 수석부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승기 상임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노섭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운모 부회장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석자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이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

안 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추가 검토 중이다. 앞서선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모여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지난해 매출 3138억... '업계 1위' 등극

영업익, 319억... 전년비 170% ↑

시몬스가 1992년 한국 법인 설립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침대 업계 1위'에 올라섰다.

1일 시몬스에 따르면 지난해 313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도 매출은 2858억원으로 10%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시몬스 침대는 업계 1위였던 에이스침대의 매출(3036억원)을 뛰어넘으며 1위에 올랐다.

영업이익은 2022년 118억원에서 지난해엔 319억원으로 170% 늘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같은 기간 4%에서

10%로 증가했다.

시몬스는 매출 상승 요인으로 ▲300만원대 이상 프리미엄 매트리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 ▲프리미엄 비건 매트리스 컬렉션 'N32'의 비약적인 성장을 각각 꼽았다.

객단가 1000만원 이상의 '뉴티레스트 블랙' 역시 2016년 출시 후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월 판매량 300개를 돌파한 이후 매달 평균 300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비건 매트리스 컬렉션 N32는 침대업계 최초로 전 제품에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비건 인증까지 획득하며 ESG경영에 민감한 요

즘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닿았다는 분석이다. 국내 프리미엄 폼 매트리스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N32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시몬스 관계자는 "불경기에 품질과 브랜드 신뢰도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선택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 매출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영업이익률이 신장한 것은 지난해 비상경영 체재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TV광고비를 대폭 삭감해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건비·지급수수료·물류비·임대료 등 원가율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여전히 (영업이익률)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4개 시중銀과 中企 혁신성장 지원

국민·농협·우리·하나銀 참여

기술보증기금이 4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보는 국민·농협·우리·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의 역동적 혁신성장 및 세계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은행이 정부의 주요 정책인 ▲신성장 4.0 전략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등에 적극 동참해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4개 은행의 특별출연금 175억원을 재원으로 총 35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의 보증료지원금 65억원을 기반으로 5071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협약은행은 보증료 일부(0.5~0.7%p ↓, 은행별 지원율 및 지원기간 상이)를 지원하는 등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으로 최대 8571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